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공개·검증 먼저”

정동영 의원, “실시 의지가 있다면 기본형 건축비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부터 파악해야”

국도교통부가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분양가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2.14% 상승해 평당 건축비 611만원이 된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한 '설계도나 시방서' 등 세부 내역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마다 두 번씩 노무비와 자재비 등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며 매년 5%씩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해 왔다.

정동영 의원은 “해마다 두 번씩 건축비를 올리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노무비, 재료비 등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공사 현장엔 인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값싼 수입산 자재가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손들어 인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충남 태안군 민리도 해수욕장에서 열린 서해안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에 참석하며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손 들어 인사하고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해마다 2.6%씩 증가하고 있다. 또 임대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표준건축비' 평당 342만원과 분양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611만원의 차이에 대해, 정 의원은 “아파트 골조(뼈대)가 분양용과 임대용이 뭐가 다르겠는가,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소비자 보호책으로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환영하지만, “근거도 불명확한 건축비 상승 공개와 검증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정동영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실이 주요 공공택지의 분양

가를 분석해보니,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 공공택지 분양에서도 기본형 건축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올해 7월 분양한 성남 고등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음에도 기본형 건축비 평당 597만원 보다 높은 평당 840만원으로 승인 분양되었다.

같은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임에도 건축비가 제각각이기도 했다.

특히 2010년 12월에 분양한 강남 세곡동의 경우, 해의 설계경기를 통해 당선작으로 건축을 했음에도 건축비는 550만원(건축비 설계감리비 등을 포함)이었다.

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의 건축비가 공급 주체에 따라 다르고, 가산비와 같은 근거가 모호한 항목을 통해 분양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제대로 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

지 않기 때문”이라며, “문재인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실시 의지가 있다면 지난 10년간의 분양원가 공개와 박근혜정부의 분양원가 검증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청문회 당시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도입하고 민간에 대해서도 탄력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국정원 댓글 지시’ 민병주 등 18일 구속영장심사

민병주 국가정보원 전 심리전담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국고손실)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 전 담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18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외곽팀장 송모씨와, 사문서 위조 행사 및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전직 직원 문모씨에 대한 심사도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민 전 담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사이버 댓글부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 운동 및 정치관계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국가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횡령하고 2013년 원 전 국정원장 사건에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 및 활동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위증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 댓글부대 외곽팀장이었던 송모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외곽팀장 여러명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및 정치관계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전 직원인 문모씨는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담 외곽팀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영수증을 위조해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던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박성진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4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2일만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준에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를 통해 중소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절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

한미 외교, 北미사일 발사 '대북공조 강화' 강조

한미 외교장관은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진화통화를 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반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하자고 뜻을 모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15분께부터 15분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

양 장관은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신규 안보리 결의 2375호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고를 발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역대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킨 데 대해 깊은 실망을 표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틸러슨 장관은 한·일에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번주 개최되는 유엔 총회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한·미간 각급에서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실패'

“도덕성 하자” 이유 자유한국당 반대... 오늘 인청특위 전체회의 개최 방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청특위 여야 간사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인청특위 여야는 이날 오후 간사간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실패한 뒤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그러나 전체회의에서도 의견 조율이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 역시 이날 중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인청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602만원짜리 크로아티아 부부여행을 다녀온 사안을 개인여행으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청문회에서 중요한 도덕성의 하자가 있다. 능력과 경륜도 부족했고 코드인사로서 문제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위증도 했기 때문에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당 소속 청

문위원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은 “24일이면 현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으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초래한다”며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경과보고서 채택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관례대로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 채택하기를 위원장과 청문위원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순금주 국민의당 간사 역시 “제 기억상으로 당시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 발언 시기, 발언 전후 경과를 비춰보면 후보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문제가 보고서 채택에까지 영향 위

서는 안 된다. 청문 절차에 참여한 4당이 함께 진중한 토론과 협의를 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소속 주호영 인청특위 위원장은 “대법원 만들어진 이후에 단 하루라도 대법원장이 빈 적이 없었고 그래서 헌법상 3년 분립의 큰 축인 사법부의 수장 공백 여부를 둘러싸고 국회가 결정을 늦추므로 공백이 생기는 거 자체는 없어야 한다는 것은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24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 직후 여야 간사는 추가 회동을 가졌으나 여기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주말간 논의를 거쳐 18일 인청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부모님도 만족하고 자녀들도 찬성하는
농지연금제도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가입비
폐지

이자율
인하

가입대상
확대

월 지급액
증가

축! 전주매일 창간
KF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땅이 드리는 평생월금

부모님께 효도하는 농지연금

소유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연금보장**
임대를 통한 추가소득도 가능

상담문의 063)540-1141~1143

www.fplove.or.kr